

'감세' 시동...양도·상속·증여세 완화

1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1년 미만 주택도 70→45% 대폭 완화

윤석열 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기·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중과 대상 범위를 줄이고 부과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하게

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5월9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9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 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외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러한 흐름을 비춰볼 때 양도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04년 도입됐지만 2009년 적용이 유예되고 2014년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자 조정지역 기준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를 더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다시 폐지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도세 개편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5월9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9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 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외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러한 흐름을 비춰볼 때 양도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04년 도입됐지만 2009년 적용이 유예되고 2014년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자 조정지역 기준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를 더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다시 폐지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도세 개편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새해 메시지

"농어업 미래 성장 산업화 선도할 것"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신년사... "새로운 도약의 해"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일 "국민 먹거리와 농어촌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꾸준히 발굴해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사장은 이날 분사에서 진행된 2023년 시무식에서 "국정 과제를 한층 더 충실하게 시행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고 미래 선도 경영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과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바이오에너지 보급 등 새로운 기능은 꾸준히 발굴해 공사의 역할과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적극적인 현장 경영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주기호 기자

이러 "2023년은 변화의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미래 농어업을 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공사는 우리 농어업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농어촌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는 올해 경영방향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최신크영, 체질을 개선하는 쇠신경영,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경영 등 3대 신경영으로 세웠다.

농어촌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기존 사업에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최신크영을 반영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체계 구축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 ▲고객 중심 농산물 플랫폼 구축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 실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등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한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변화를 실행하고, 공공기관 혁신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기호 기자

고병일 광주은행장 취임 "기본 충실, 변화·혁신시대 돌파"

광주은행은 2일 제14대 고병일 광주은행장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행 출신인 고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광주은행의 55년 역사를 이어받아 100년 은행의 성장을 꿈꾸는 중차대한 시기에 은행장의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탄탄한 기초체력을 다져 내실 성장을 지속해 온 광주은행이 위기를 기회 삼아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앞장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된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면서 '고객'과 '실력', '확실한 경쟁력'을 기본으로 갖추어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주요 경영방침으로 ▲고객과의 공감 및 소통,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금융 지원체계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하며 지역경제 생태계 내 광주은행 영향력 확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능동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조직 운영 ▲대면·비대면 채널, 사업·기능별로 장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확실한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다.

광양제철소 2열연공장 '생산성 신기록 달성'

광양제철소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압연피치(Pitch) 신기록을 4개월 연속 달성해 포항제철소의 냉간법압연으로 인한 수해 이후 최대 생산 체제에 부응했다.

압연피치는 가열로에서 나온 슬래브(철강반제품)가 압연 작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음 슬래브의 압연 작업 시작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압연피치를 단축시킬 경우 줄인 시간만큼 더 많은 코일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광양제철소 2열연공장은 압연제품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작업 최적화를 펼쳤다. 압연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가열로 제어시스템을 재검토하고 Si를 통한 자동화기술을 도입해 운영 방식의 최적화를 도출해냈다.

또한, 열연제품의 실수율을 저하시키고 생산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 고인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설비 밀착관리를 통한 설비 강건화에 역량을 집중해 고인율을 약 20% 감소시켰다.

먹거리부터 패션까지 새해부터 이어지는 가격 인상 2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먹거리·패션·뷰티 등 유통업계 가격 인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유통업계는 인건비·물류비·원재료비 상승 여파에 가격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지는 가격 인상으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늘어날 예정이다. /뉴스

"이자 내느니 월세 산다" 월세시대 본격화...첫 40% 돌파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9만4924건...전월세 거래 중 42.3%

"대출금리가 6~7%까지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만 월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올랐습다.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계약이 끝나는대로 이사를 나와 월세로 들어갈지 고민 중이예요."(30대 신혼부부 A씨)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수요가 급감하면서 월세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40%를 뛰어 넘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전년 기준 9만4924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 22만4391건 중 42.3%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의 월세 비중은 지난

2020년 평균 31.4%에서 지난해 38.5%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통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겼다.

심지어 월 1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도 대폭 늘어났다.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2월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중 월세 100만원 이상은 8만812건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7년 2만4015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100만원 이상 월세는 3만311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월세 선호 현상은 올해 초 1.0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3.25%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전세를 피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년 말 대비 5.23%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 변동률(-4.79%)보다도 더 큰 하락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입주장에 들어선 신축 대단지 인근은 세입자 구하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역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 이프레지타스' 전용 59㎡의 경우 당초 13억원 내외에 전세 매물이 올라왔지만 최근 6억원대까지 호가가 내려왔다.

조종래 제25대 광주·전남중기청장 취임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에 최선"

조종래 제25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청장은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업진흥청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로 창업벤처국 구조개선과장, 생산기술국 생산혁신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장, 중견기업정책과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음부조만지원단장, 감사연구위원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 신임 청장은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 정책 수립·운영 경험을 살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업진흥청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광주 유통가 설 선물 판매 대전 '스타트'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설 선물세트 판매 행사 돌입

광주지역 유통가 설 선물 판매 대전에 돌입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3일부터 21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고객선호도가 높은 고단가 및 저단가 선물세트를 이원화 전개한다. 지난 2022년 설명절에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프트 상품들을 리마인드 전개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이날부터

20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점은 이번 설명절 역시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가심비'를 중요시 한 고급 선물 상품의 선호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주요 상품군별 프리미엄 상품을 더욱 강화했다.

호남지역에서 엄선한 재료와 기준으로 생산자의 정성을 담아 만든 지역 대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권현안 기자

광양지역 기업 1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 '82.5'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휴일 제외 10일간) 조사한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가 82.5P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분기(82.7)와 비슷한 결과로 5분기 연속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100 이하를 기록하며 내내에도 어려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73.9P이며, 전남은 79.1P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광양·주순희 기자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절반에 가까운 45%가 1.0~1.5%, 1.5~2.0%(37.5%)로 답했으며, 2.0% 이상은 5%에 불과하고 1.0% 이하도 12.5%에 달해 이는 잠재성장률(2%)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뤘다.

정부도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에 못 미치는 1.6%로 공식화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 1%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도 환율수준은 1300원~1350원이 82.5%를, 1400원 이상은 12.5%, 1300원 이하는 5.0%로 나타나 '고환율'과 함께 금리 수준은 4.5%~5.0%가 절반(50.0%)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양·주순희 기자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노인 등 '직접일자리' 104만개

전년보다 3.9% 감소했으나 정부안보다 소폭 늘어

올해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여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을 크게 늘린 고용유지지원금은 대폭 축소하고, 일명 '세금 알바'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접일자리 예산은 소폭 증가하며 규모를 유지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24개 부처의 181개 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30조 34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31조5809억원) 대비 1조2328억

원(3.9%) 감소한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감소한 것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30조340억원)보다는 3140억원(1.0%) 늘었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3조2244억원 ▲직업훈련 2조7301억원 ▲고용서비스 1조7745억원 ▲고용장려금 5조634억원 ▲창업지원 3조1484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13조4404억원 ▲지원고용 및 재할 9669억원이다.

이 중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전년(103만명)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직접일자리 대부분은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액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주민감시요원 등으로 그간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직접일자리 인원을 98만3000명으로 줄였으나, 취약계층 소득에 도움이 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양당의 비판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원과 예산을 다시 늘렸다.

다만 5대강 지킴이, 주민감시요원은 예산을 줄이고 지역방역일자리는 폐지했다. /뉴스